

# ‘내란’ 수사권 없는 검찰 수사… 재판서 ‘위법’ 논란 될 수도

### 검찰·공조본 수사 2파전에 ‘윤석열 수사기관 소핑 찬스’ 논란 “경찰 주도 기초수사 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보완해야” 의견도

검찰과 공조본 수사(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중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수사가 추후 위법수사와 위법증거 수집 논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의 경쟁수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사기관을 택하는 등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과 공조본은 16일 각각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를 통지했다.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검찰·경찰·공수처가 각기 수사권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중복 청구되거나 피의자 신병이나 압수 물품이 분산 확보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공조본을 꾸렸다.

검찰 측(검찰과 군검찰)은 합류 하지 않고 단독 수사하고 있다.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단독행보를 하는 이유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 대통령에 수사권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으로 검찰은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양 수사기관이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자 ‘수사기관 소핑 찬스’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는 수사기관이 향후 수사권을 주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본 중 어느 곳을 선택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거친 만큼 검찰 출석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후배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는 것을 꺼려 공조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오히려 양측에서 동시에 출석요구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수사 불응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와 위법증거 수집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본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검찰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절차적 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중독해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면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사 절차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사권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위법수사 문제 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만 보완, 검토를 하고, 특검 출범 때까지는 법에 따라 경찰 주도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수사권 문제도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신뢰가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수사인만큼 검찰은 공조수사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있다.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최인규 변호사는 “경찰 수뇌부인 경찰청장이 피의자인 상황에서 검찰도 수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맞다”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최 변호사는 “결국 현재 상황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재판과정은 수많은 증인을 불러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신문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형사 재판은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민주 “헌법재판관 후보 23·24일 청문회”…국힘 “합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24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에 내정된 김한규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과 만나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박규택 의원과 논의했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 23~24일 이틀간 세 번의 청문회를 같이 하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상황이라서 내부 보고 절차가 거치지 어려운 상황이라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24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회 관련해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문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창석 변호사, 이나영 중앙대 교수, 김석우 법무부 차관, 우 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범 변호사. /연합뉴스

## ‘내란 특검’ 누가 될까… 후보 추천위 위촉식

### 우원식 국회의장, 위원 7명 위촉 2명 대통령에 추천하고 1명 임명

‘12·3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상설 특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 등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요구하는 등 특검 수사에 대한 야당의 압박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특별검사(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된 이번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로 총 6명이다. 당연직 위원인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출장 일정으로 불참했다.

위원들은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이석범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난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약 261시간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대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서 특별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과정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또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주목하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엄정히 묻어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 대통령이 주도하고 여러 국가기관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높다”며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위원회의 건설적인 회의·토론을 통해 신뢰받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후보자를 국회가 추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도 이날 특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이 신속하게 구성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여수갑) 최고위원도 “내란사건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이행은 권한대행의 기본 책무이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